




— 산업정책

- 
- 경기도, 중소기업 환경보전기금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지원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자금)
 - 내년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 확대
 - 관세청, 중소기업 AEO인증 획득 돕는다
 - “무늬만 동반성장 엄벌”
 - 6만개 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 점검
 - 중기청, 한일 문서자동번역 프로그램 1000개 배포
 -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연구개발 1517억원 지원
 - 중기청, 하반기 창업성장R&D 350억 지원
 - 중기청, 첨단연구장비 활용 신제품 개발 지원
 - 도로통행료·전기료 등 공공요금 차등요금제 확대 검토
 - 녹색인증 대상 확대로 녹색산업 성장 지원 가속화
 - ‘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위한 산업보안 온라인교육 서비스’ 오픈
 - “지경부, 소모성자재(MRO) 중소기업체 통해 구매”

경기도, 中企 환경보전기금 지원 확대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비를 저리 용자로 지원하는 환경보전기금 지원 대상 사업을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 확대로 환경오염물질 측정사업과 폐수 처리업,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행업,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사업 등이 새로 기금 용자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10억원 한도에서 3.5%의 저리로 은행 용자를 받을 수 있으며, 시중 금리 가운데 나머지 이자 비용은 환경보전기금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237억원의 환경보전기금을 운영 중이며, 2006년부터 지금까지 92개 업체에 265억원을 용자 지원했다.

○ 문의 : 031-8008-4225

中企지원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자금) “공장 집단화에 시설자금 45억 지원”

협동조합이나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장을 집단화하거나 협업을 추진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자금이 바로 신성장기반자금중 협동화자금이다.

이 자금은 협동조합은 물론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입지문제 해결, 공해방지시설 설치, 기술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창업초기 기업 등 1년 미만인 업체는 참가업체수의 절반 이내로 제한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지역에 사업장과 부대시설을 집단화하는 경우나 개별 설치가 어려운 고가의 생산시설, 연구개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할 때, 경영개선을 위해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 상표개발, 원자재구매, 해외시장 진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건물·부지매입비, 건축공사비, 기계시설 도입비 등 시설자금의 경우 10년간 45억원(참가업체는 40억원)까지 지원한다. 협업화자금은 소요자금의 100% 이내서 5년간 40억원(참가업체는 3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장 가동이나 연쇄도산방지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은 5년간 5억원까지 소요자금의 100% 이내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4.19%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이나 중소기업체가 업체들을 규합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실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 기타사항 문의 전화 :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팀 : 02-2124-3101~4.

내년 中企 산업기능요원 확대

내년도 중소기업에 배정되는 산업기능요원이 모두 7천명으로 올해보다 1천500명 늘어나고 산업기능요원제도도 산학협력을 통해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위주로 재편된다.

중소기업청은 내년 폐지에 예정이던 산업기능요원제도가 2015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같은 개편방향을 정하고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희망하는 업체들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배정인원은 현역의 경우 3천700명에서 4천명으로, 보충역의 경우 1천800명에서 3천명으로 늘어난다.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특성화고 졸업생을 고용 중인 기업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평가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또 해당 업체들은 일반기업(1~2명)보다 많은 최대 10명의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성화고 졸업생이 중소기업 취업후 산업현장에 근무하면서 병역문제를 해결하고 중단없이 우

수기능인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다.

신청 및 접수는 각 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12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병역지정업체 신규선정 및 내년도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이 기간중 신청하면 되며, 최종결과는 7월말까지 중소기업청의 추천을 받아 병무청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거친 뒤 올 12월까지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기업별 산업기능요원 배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청, 中企 AEO인증 획득 돕는다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수출입안전인증업체(AEO)' 인증 획득 지원에 본격 나선다. 관세청은 '중소기업 AEO 인증획득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업체 53개를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AEO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관세청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쉽게 AEO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세관당국이 안전관리수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업체로서, 물품검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우리

산업정책

AEO 공인수출기업이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통관상 혜택을 부여 받게 된다.

현재 AEO 인증 업체수는 140개이며 이중 중소기업이 35개, 대기업이 105개로 대기업에 편중되었다.

이러한 대기업 편중현상은 AEO 제도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인력·자금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이 AEO 인증 획득에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이와같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의 AEO 인증획득을 돕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지원대상업체가 AEO 전문기관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는 한편, 관련 비용도 업체 1곳당 최대 1815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 중 수출·수입 부문 AEO를 동시에 인증 받고자하는 업체에는 최대 181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수출 또는 수입 중 1 부문만 신청하는 경우는 최대 1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AEO를 획득한 기업 수는 140곳이지만 대부분이 대기업으로 중소기업은 35곳에 지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의 AEO 획득을 돕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컨설팅 비용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AEO 공인기준 및 절차를 다소 간소화하는 제도개선 작업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9년 4월부터 AEO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미국·캐나다·싱가포

르·일본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고 중국·베트남·인니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 문의 : AEO진흥협회 (042-481-7865)

“무늬만 동반성장 엄벌”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들의 지능적인 횡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엄벌을 선언하고 나섰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56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마친 가운데 무늬만 동반성장을 내세우는 대기업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하청업체 납품단가 부당인하 의혹에 대해 전격 조사에 나선 데 이어 조만간 대형유통업체를 비롯해 제조업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은 대기업들이 하청업체 및 협력업체들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여전히 지능적이고 변칙적인 횡포와 부당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한 일부 대기업들이 하도급 및 협력업체에 대해 협의와 합의의

모양새만 갖추면서 실질적으로는 사업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거래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반 성장 협약이 제대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협약내용을 잘 지키는 대기업에 대해선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지만 무늬만 동반성장인 대기업에 대해선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말까지 정부의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56개 대기업들은 공정위의 독려에 따라 하청 및 협력업체들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을 체결을 마쳤다.

그러나 일선 하청 및 협력업체들은 동반성장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들이 하도급거래에서 더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횡포를 부리거나 압력을 넣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가 지난 7월 납품단가 부당인하 의혹 조사에 착수한 현대·기아차의 경우 56개 대기업 가운데 제일 먼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 한때 공정위로부터 동반성장정책의 적극 협력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한편, 무늬만 동반성장인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다음 표적은 대형유통업체라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4월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거래실태에 대한 서면 조사를 벌인데 이어 이달 중에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형유통업체들의 부당반품행위, 관측비용전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기 때문이다.

6만개 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6만개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는 2차 이하 협력사의 범위만 실태와 계약서를 주지 않는 하도급실태를 파악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1999년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법 준수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대규모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특히 작년까지는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을 함께 조사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업종별 심층조사를 위해 제조업과 건설·용역업을 분리, 격년제로 순환조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올해 조사대상은 제조업 관련 원사업자 3천개 업체(매출액 200억원 이상)와 수급사업자 5만7천개 업체다.

공정위는 내달 13일까지 4주간 3천개 원사업자 업체에 대해 조사한 뒤 8~9월에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10~11월에는 자진시정을 촉구한 뒤 12월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범위는 2010년도 하반기의 하도급거래이며, 조사내용은 ▲계약내용 서면미교부, 부당감액, 부당

한 하도급대금 결정, 지연이자 및 어음 할인료 지급 여부 등 하도급법 위반 ▲현금성 결제비율, 어음결제 비율 및 기간 등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실태, 3대 가이드라인 운용실태 등이다.

공정위는 “올해 실태조사에선 2차 이하 협력사의 범위만 실태를 파악하고 대금 미지급행위 이외에 계약서를 주지 않는 하도급실태를 파악해 시정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999년 이후 대규모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범위반 혐의업체 비율은 1999년 89.3%에서 작년 47.0%로 감소했고 현금성 결제비율은 1999년 34.8%에서 작년 92.9%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0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하도급거래 불공정행위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지적됐다. 범위반 혐의 업체 비율은 42.9%에서 47.0%로 늘어났고, 현금성 결제비율은 93.2%에서 92.9%로 낮아졌다.

공정위는 또 12년간 서면조사 후 시정조치로 인해 22만여개의 중소하도급업체가 3천943억원의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받는 등 혜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중기청, 한일 문서자동번역 프로그램 1000개 배포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사업가로 변신한 CSLi마케팅컴파니(주) 대표 탈렌트 정성모씨가 기증한 한일 문서 자동번역 소프트웨어 1,000개(8억원 상당)를 일본과 교역하는 중소기업에 배포한다.

정성모 대표는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차원에서 중소기업청에 이와 같은 제안을 하였고, 그 동안 중소기업청 관계자의 동 프로그램 정확도 등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쳐 왔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한일 문서 자동번역 소프트웨어는 문서, 메일 및 인터넷 사이트의 내용을 한국어는 일본어로 일본어는 한국어로 번역되며 정확도는 97%이상 완벽하다고 말하고,

본 번역프로그램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관할 지역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사용 ID를 배부 받을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ID배부일로부터 2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 문의 : 국제협력과 민경기(042-481-4469)

중소 산학연 협력연구개발 1517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2011년도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1,409개 중소기업과 233개 대학·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1,517억원(국비 1,197억원, 지방비 320억원)의 지원에 나선다.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역사업 : 1년간 1억원, 전국 및 국제사업 : 2년간 4억원)

*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설치 및 업그레이드 : 2년간 5억원)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부문에 따라 최대 12.5: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연구개발에는 219개 대학의 1,368명의 교수와 14개 연구기관의 41명의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에 접목할 계획이다.

* 경쟁률 : 지역사업 1.6:1, 전국사업 4.6:1, 국제사업 2:1,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사업 3.3:1, 부설연구소 업그레이드사업 12.5:1

금년도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사업은 그 특징으로 첫째, 일자리 창출효과가 예상되는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업력 5년 이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제 590개에 약 300억원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결과물을 업종별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기술보급형 과제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6개

중소기업 조합에 약 9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은 독자적인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을 통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년의 경우 매출액 20억 미만 업체의 비율이 74.4%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저변을 확대하고 특히 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 문의 : 기술협력과 이재규(042-481-4458)

중기청, 하반기 창업성장R&D 350억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창업초기기업과 소기업 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창업성장기술개발 자금 350억원을 하반기에 투입한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지원 대상이 유사했던 기존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창업·실용 과제와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을 올해부터 통합·개편한 사업이다.

*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창업실용과제('10년, 656억원) +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 ('10년, 100억원)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11년, 950억원)

금년도 사업 예산은 총 950억원이며, 이중 600억원

이 상반기 창업과제와 성장과제에 각각 300억원씩 투입되었다.

이번 사업은 다음과 같이 타 R&D 사업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원 대상을 창업 초기기업과 소기업 위주로 설정하여 아직은 기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기업들의 성장을 유도하는 사업이라는 점이며, 둘째, 지정공모형 과제 위주로 지원하는 타 사업과 달리 100% 자유응모형 과제만을 지원하여, R&D 수행경험이 부족한 초기 기업들의 R&D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지원 예산을 배분*하여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강화시키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 예산배분 기준 : 과제 신청업체 수(50%), 5인 이상 중소기업체수(25%), 재정력지수(25%)

본 사업의 신청자격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5년 이하 기업은 '창업과제', 5년 초과 기업은 '성장과제'에 신청·접수하여야 한다.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전체사업비 75% 한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며 개발기간은 1년이다.

하반기 신청·접수는 6월 27일(월)~7월 13일(수)까지 온라인 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이루어지며, 서면, 대면, 현장 평가를 거쳐 11월에 지원과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상반기 동 사업에 과제를 신청하여 탈락한 업체는 동일 과제를 하반기 사업에 신청할 수 없으며, 기업당 자유응모형 과제 지원횟수를 4회로 제한

한 중기청 R&D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이므로, 이 점에 대한 신청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문의 : 기술정책과 김민규(042-481-4402)

중기청, 첨단연구장비 활용 신제품 개발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2011년도 연구장비공동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26개 중소기업과 15개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76억원을 지원한다.

* 연구기관 제안과제(지정공모과제) : 14개과제 60억원(2년간 5억원이내 지원)

*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과제) : 12과제 16억원(1년간 1.5억원)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평균 2.81: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연구개발에는 15개 연구기관에서 30여명의 책임연구원과 26개 중소기업에서 60여명의 연구원이 참여하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인력, 첨단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에 접목할 계획이다.

* (경쟁률) 연구기관 제안과제 2.43:1, 기업제안과제 3.25:1

금년도 연구장비공동기술개발사업의 지원현황을 보면 ①연구기관 제안과제에 대하여 14개과제 60억원을 ②중소기업 현장의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기업

제안과제에 대하여 12개과제에 16억을 지원한다.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은 첨단연구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의 기술개발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수요를 감안하여 오는 7월중 추가로 업체모집 공고를 통하여 하반기중 60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 문의 : 기술협력과 김지현(042-481-4457)

도로통행료 · 전기료 등 공공요금 차등요금제 확대 검토

도로통행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에 대한 차등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물가동향 및 향후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하반기에도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물가안정을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속도감 있게 추진 △시장친화적·창의적 방안 발굴 △현장 중심이라는 4가지 방향으로 정책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13일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후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20여

가지 정책수단을 참고하여 추가적인 물가안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으며, 공공요금 차등요금제 확대 방안이나 쇼셜커머스·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과 같은 시장친화적이고 창의적인 정책대안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생계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조기에 완화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대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조속히 확정짓고 하반기로 계획돼 있는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석유제품 가격공개 확대 등 구조적 과제도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조기에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지난 15일 박재완 재정부 장관과 김종수 한국은행 총재가 합의한 거시정책실무협의회 구성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첫 회의를 7월에 개최한 후 매월 1회 정례화시키기로 했다. 한편, 임종룡 차관은 에너지 수요가 큰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 국민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경제 전반에 걸쳐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하반기에도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시장친화적이고 창의적인 대책을 발굴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녹색인증 대상 확대로 녹색산업 성장 지원 가속화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 고시 -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경)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녹색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인증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규정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10.4.14 제정)을 5.17일자로 개정 고시하였다.

○ 녹색인증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의거, ‘1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서 녹색산업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투자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금번 개정고시를 통해 기존 10대분야 61개 중점분야의 녹색기술 인증대상에 태양열, 지열, 핵융합, 콘텐츠, 바이오의약 등 24개 중점분야를 추가하였으며,

* (기존) 61개 중점분야 1,263개 핵심기술 → (개정) 85개 중점분야 1,745개 핵심기술

○ 도입기 기술 등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큰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수준을 완화해서 적용함

* 녹색기술 인증대상 및 기술수준 갱신을 위해 ‘10.12월부터 5개월여간 민간합동 작업반 운영(분야별 전문가 360여명 참여)

○ 또한, 녹색사업 인증대상으로 기존 녹색프로젝트 외에 기업의 녹색설비투자를 포함하는 등 산업계 니즈를 반영해 녹색산업과 관련한 금융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함

□ 녹색인증 평가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기술시장성 평가 등 금융권의 여신심사와 중복소지가 있는 평가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신청인의 부담을 줄였으며,

○ 이와 별도로 향후 금융권에 여신을 신청한 녹색인증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녹색인증 신청부터 인증평가 결과 및 여신심사 결과를 연동한 금융권 전용시스템을 구축(첨부3)하고, 지난 ‘10년 8월 발표한 녹색인증기업 지원을 위한 25대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등

○ 汎정부 차원에서 녹색인증을 통한 녹색금융 연계 및 기술사업화 소주기 지원을 통해 녹색산업 성장 지원을 지속 강화할 계획임

‘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위한 산업보안 온라인교육 서비스’ 오픈

□ 지식경제부는 ‘11.6.7(화) 기업의 산업보안 역량 제고를 위한 산업기술보호 온라인교육 서비스(www.kaits.or.kr)를 새롭게 개편하여 오픈하였음

○ 새롭게 개편한 산업보안 온라인교육 서비스는 해외시장 진출기업 및 핵심기술 보유기업 등의 기술 유출 방지 방법, 산업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

□ 산업보안 온라인교육 서비스는 해외시장 진출 기업 과정, 핵심기술 보유기업 과정, 산업보안 전문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전·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 방법과, 핵심기술 보유기업의 업무 상황별 기술유출 대응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

○ 이밖에도 산업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대한 설명 및 보안담당자를 위한 전문가의 노하우 공개 등 기업의 산업보안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정보 제공

□ 지식경제부는 이번 산업보안 온라인교육 서비스의 재오픈으로 기업들이 산업보안 교육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실시할 수 있어 기업의 보안역량 강화 및 기술보호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특히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회장:한민구)에서 실시하는 산업기술보호 방문교육과 같은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함께 활용한다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육 시간과 편의의 최적화를 가능케 함

○ 산업보안 온라인교육 서비스는 어느 기업이나 개인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KAITS) 홈페이지로 (www.kaits.or.kr) 신청만 하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음

“지경부, 소모성자재(MRO) 중소업체 통해 구매”

- 최종경 장관, 지경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권고 -

지식경제부(장관 : 최종경)는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모성 자재 구입시 대기업 MRO 업체 보다는 가급적 중소업체를 통해 구매토록 권고하였으며, 2011.6.8(수)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시달하였다.

앞으로 지식경제부는 동반성장의 주무부처로서 우리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하고, 동반성장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1. 소속기관 (16개)

- 기술표준원,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동부광산보안사무소, 서부광산보안사무소, 중부광산보안사무소, 남부광산보안사무소,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울진자유무역지역관리원,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전기위원회,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2. 산하 공공기관 (60개)

구분	대상 기관
공기업 (12)	전력공사(이하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남동발전(주), 남부발전(주), 동서발전(주), 서부발전(주), 중부발전(주),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준정부 기관 (20)	산업단지공단, 산업기술시험원, 디자인진흥원, 세라믹기술원,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광해관리공단, 전력거래소, 에너지기술평가원, 석유관리원,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예금보험지원단, 우편물류지원단, 우편사업지원단
기타 공공기관 (28)	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 산업기술연구회, 생산기술研, 전자통신研, 식품研, 기계研, 전기研, 화학研, 건설기술研, 철도기술研, 지질자원研, 에너지기술研, 기초전력연구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인천중합에너지(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 (주)강원랜드, 가스기술공사, 표준협회, 생산성본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문화재단, 로봇산업진흥원(신규)

